

제조기업, 휴일근로 제한 “반대”

울산상의, 67.2%가 부정적 입장 ... 생산성 낮아지고 임금 축소

울산지역 기업체 상당수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사실상 휴일근로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67.2%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3월5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50%는 “휴일근로가 사라지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임금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17.2%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절충안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는 “휴일근로 제한에 따라 설비를 추가 증설하고 인력을 확충한 후 주문량이 감소하면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절대다수가 반대했다.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임금손실은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의견(58.5%)이 많았다.

또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량 축소 극복방안으로는 “현행 설비와 인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입장(44.5%)이 우세했다.

휴일근로 제한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 때문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71.1%,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한 곳이 55.5%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응답기업의 82.8%는 현재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는 지역의 제조업 101개사와 비제조업 27개사 등 1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6>